



newstapa.com

2012. 4. 8.

발신처: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한국언론회관 1802호 Tel.02-739-7285 fax 735-9400

## 보도자료

청와대, 인권위에 “문제 직원 분류한 ” 인사기록 명단을 전달하며  
직원 관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가 독립기관인 인권위를 대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해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 나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은멸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가운데, 해직언론인과 언론노조가 함께 만드는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지난 2009년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이념 성향을 분류한 인권위 직원 인사기록 명단을 인권위 고위간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독립기관인 인권위를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권위 직원들을 숙아내서 이들의 인사기록을 해당기관에 직접 전달해 관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3. 전달한 사람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만난 인권위 고위간부는 시민사회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행정관은 2009년 10월 초 인권위 고위간부를 만나, 이념성향을 분류해 이른바 ‘좌파’적 성향의 인권위 직원 10명의 인사기록을 전달하면서 이들 직원들의 관리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은 현진권 교수로, 현 교수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위해 연락을 했지만 통화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4. 취재팀이 확인한 청와대 인사가 전달한 인사기록 명단에 포함된 인권위 직원은 모두 10여명입니다. 이 명단 가운데는 정권에 부담스러운 사건을 주로 조사했던 인권위 조사관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 김 모 사무관의 경우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을 지적하며 헌법에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무시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또 청와대 명단에 포함것으로 확인된 김형완 전 인권위 정책과장 역시 비정규직 문제와 용산 참사에서 인권침해 조사를 요구하는 등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력이 있습니다. 김형환 전 과장은 2010년 업무에서 배제됐고 결국 인권위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며 오직 사실관계를 통해서면 인권조사를 해왔을 뿐이고, 특히 인권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인권적 차원에서만 다를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이같은 문건이 전달된 전후로 인권위는 별정직 직원 10여명이 계약해지 등으로 인권위를 떠났고 10여명의 직원은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문경란 상임위원과 유남영 상임위원, 조국 비상임위원, 그리고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 60여명도 인권위가 정권에 눈치보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자진 사임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인권위는 용산참사와 MBC 피디수첩, 미네르바 사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정권에 부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2010년 7월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지만 6개월동안 끌어오다 문제삼을 수 없다며 기각시켰습니다.

7. 2009년 청와대가 직접 인권위 고위간부를 만나 문제 있는 직원들을 골라 그 명단을 직접 건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권위 파행에 핵심에는 청와대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문건을 건네받은 인권위 고위간부는 “청와대가 특정한 이념성향을 별도로 분류해 직원들만 선별해 인사기록을 넘긴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인사기록은 사찰로 얻은 것이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사기록으로 대단히 평범한 사항을 담고 있어, 블랙리스트로 보기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8. 이같은 내용은 오늘 오후 업로딩 예정인 뉴스타파 11회에 자세히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2012년 4월 8일  
뉴스타파 제작진